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대응 노력

대전 중구는 16일 '2025년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날로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문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대전중부경찰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전문기관 등이 참석해 유관기관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2026년도 추진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추진 사업은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강화와 ▲전사회적 예방 및 대응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 아래,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나는 배우다 연극교실',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등 총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문인환 부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채봉 기자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종료

최장기간 산불제로

충북 보은군이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산불 '제로' 최장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온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33일이 넘는 기간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내 산불 미발생 최장기간 기록이다.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산불 '제로'기록을 유지하며 2025년 산불 제로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군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수확기 이후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요인에 대비해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공무원 19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 산불감시원 63명 등 100여 명의 산불 대응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보은군은 보은읍 어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며 산시 대응 기반도 강화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와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병행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왔다. 대책본부 운영은 종료됐지만, 연말까지 산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가맹택시 2호 가맹택시(K-Taxi) 출범

곰씨 캐릭터 래핑 및 예약호출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올해 법인택시 2500대



대전형 가맹택시 2호 '대전케이택시(K-Taxi, 대표 박종명)'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고 출범했다. 대전케이택시는 올해 9월 카카오도빌리티와 카카오T 플랫폼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10월에 대전시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며, 대전시로부터 제반사항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운임 및 부가서비스(호출료 등)'는 대전광역시시의 방침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11월 28일 면허를 부여받았고, 12월 12일부터는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케이택시의 브랜드 '케이택시

(K-Taxi)'는 올해 3월 출범한 대전지역 1호 가맹택시 '곰씨'에 이어 두 번째로 면허를 받은 가맹택시다.

Kind Taxi(친절하고 따뜻한 택시), Keeping Taxi(신뢰와 안정성을 지키는 택시), Kick/start Taxi(혁신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플랫폼 택시), Another Kako Taxi(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는 택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유료 부가서비스인 예약 호출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으로 이용료는 수요, 교통 상황 등을 고려 0원에서 5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예약 호출은 탑승 10분 이후부터 1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케이택시는 올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2,500대, 내년에는 개인택시까지 확대해 총 4,000대 가맹 목표를 세우고 본격 가맹점 모집에 나설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대전케이택시와 협업해 케이택시 외장을 곰씨 캐릭터로 래핑할 예정이다.

남시덕 국장은 "지역형 가맹택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결빙(블랙아이스), 수막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위해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시는 터널 입구, 교량, 급커브,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개소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했다.

이채봉 기자

충주시, 할랄 인증 협력 업무협약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세루나이 그룹 인증 협력

충주시는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 세루나이 그룹과 지역 농산물의 할랄 인증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절차·기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MDEC는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농업 및 할랄 기술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 충주시와 함께 디지털 기반 농식품 관리 체계와 관련된 정보 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생산·유통·수출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리 절차, 기술 적용 가능성, 물류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관련 분야의 운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세루나이 그룹은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자킴(JAKIM)의 할랄 인증 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할랄 식품이란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으로 재료·도축·가

공·조리 등 환경에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인증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산물이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안내, 인증 기준 설명, 서류 준비 과정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충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의 인증 제도 운영 방식, 해외 유통 구조, 시장 진입 시 요구되는 규정 등을 파악해 향후 수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상담 지원, 인증 안내 등 실무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할랄 인증과 관련된 절차와 제도를 현지 기관과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문 열었다



세종시가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세종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교육기관으로, 조지원 행복주택 상가 2층, 전용면적 503.56㎡ 규모로 조성됐으며 교육·사무 공간과 공용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기술교육은 물론 한국어·문화교육,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최초의 외국인 대상 기술인재 양성기관인 만큼 저출

생·고령화 시대 산업현장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외국인 기술인재의 유치·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제작,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혁신 입문과정, 생성형 인공지능(AI)·자외선(UV)프린팅, 한국문화 하루체험 등 4개 시범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15개 과정에 330명의 교육 참여를 목표로 정규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수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도비도, 난지도 개발 전담팀 첫 회의 개최

1.9조 규모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특구 지정·인허가 대응체계 집중 점검

충청남도가 1조 9000억 원 규모의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 도·당진시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비도·난지도 지원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4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특구 지정 △인허가 절차 △개발계획 보완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는 경과보고를 통해 11월 11일 실시한 주민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개발의 전체 구상과 인허가 절차, 협의 일정, 도비도

특구 지정과 난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배치, 환경·재해영향평가, 단계별 개발 로드맵 등 구체적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비도 구역에는 △해양치유 호텔·콘도 △클럽핑 타운 △인공 라군 △해수스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난지도 구역은 △최고급 골프장 △오션콘도 △잘라인 △펍가든 △유흥선 등 다양한 레저시설 등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참석자들은 "이 사업은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얹혀 있는 만큼 사업 추진력을 얻기 위해 초기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와 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워킹 행정'에 들어간다.

해양수산국장을 중심으로 6개 실국 7개 과가 참여하는 지원 전담팀이 우선 가동되고, 사업을 진행하며 탄력적으로 지원부서를 추가해 특구 지정 지원, 인허가, 계획 변경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연중 전지훈련이 가능한 특화시설 지원, 체류형 음식 연구개발센터 구축 등 국가 공모사업을 이끌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전형식 정부부지사는 "도비도·난지도는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간"이라며, "충남 서해안이 세계적 해양레저관광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시통밀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